

주요변경사항

사업명	현행(2018)	변경(2019)	변경사유
향토산업 육성 지원	<p><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대상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인조직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향토기업체 등 	<p><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대상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인조직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향토기업체, <u>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</u>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푸드플랜 사업대상자 추가
향토산업 육성 지원	<p><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정 우대사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신설> 	<p><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정 우대사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농식품부로 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우대
향토산업 육성 지원	<p><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정 가점부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신설> 	<p><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정 가점부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·군·구에 속한 사업대상자에 가점 부여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푸드플랜 시·군·구에 가점부여
향토산업 육성 지원	<p><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정 우대사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 선정시 <u>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 (174개소)</u> 우대 	<p><주요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정 우대사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 선정시 <u>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(187개소)</u> 우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 변경
향토산업 육성 지원	<p><사업추진체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 단위로 자체 지정한 자격검증 항목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	<p><사업추진체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격검증 DB 적용으로 자체지정항목 외에 <u>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자격검증 항목을 추가하여 검증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정수급여부 필수 - 경영체등록여부 선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조금 부정수급의 선제적 예방 효과 강화

* 2020년 사업자 선정시 부터 상기 변경내용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

향토산업육성사업

[illegible]

1. 사업대상자

- 농업인 조직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향토기업체, **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** 등
 - *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·도 또는 시·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{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(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)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}

< 관련법령 >
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6조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72조
- 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산·학·연·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
 -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,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·자부담의 확보,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
- 농업법인·조직의 경우,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(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·가공법인 제외)
- 작목반, 법인이 아닌 제조·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
 - * 법인이 아닌 제조·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적용
 - 다만, 사업단이 비영리법인 등을 구성하였을 경우, 1년 미만 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(단, 신규지구 선정지침 내 신규법인 설립 기준* 준수)
 - * 최고 출자한도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% 미만, 출자인 10인(법인의 경우, 1인으로 간주) 이상으로 구성(농업인 5인 이상)

3. 지원대상

-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
- 1·2·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
 - 단,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·면적(전국 내 지역비중), 생산농가 수 및 기타 산업화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
- 전통적인 농업자원, 전래기술·문화·관광·자연자원 등
- 농식품부로 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(5개년)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
- 푸드플랜(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,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)을 추진하는 시·군·구에 속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점 부여
- 지리적 표시 등록,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
- 융복합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
- 경영체(들녘별경영체 등)나 생산자조직과 연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·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부여
-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,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

<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('18.12월말 기준) >

시도	시군	품목	지역 및 품목		
계	21	38			
경기	8	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주(쌀) • 화성(포도) • 김포(새싹인삼+가공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천(돼지,쌀밥) • 평택(쌀) • 파주(산머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양평(쌀가공식품) • 안성(쌀)
강원	13	2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주(고구마,토종다래) • 동해(포도,찰옥수수) • 인제(오미자,곰취) • 횡성(더덕,한우) • 홍천(жат,인삼,한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창(황태,한우,약콩,배추) • 양구(시래기) • 강릉(한과,감자,산채) • 태백(곰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월(장류,곤드레,포도) • 정선(황기,사과) • 양양(산채,곶감,떡) • 화천(토마토)

시도	시군	품목	지역 및 품목		
충북	10	11	• 충주(당노 바이오) • 제천(약초) • 보은(대추) • 영동(포도)	• 증평(인삼) • 단양(아로니아) • 옥천(한우)	• 괴산(친환경잡곡, 버섯) • 청주(사슴) • 음성(들깨)
충남	12	19	• 태안(고추, 화훼) • 예산(사과) • 당진(쌀) • 공주(알밤, 한우)	• 보령(돼지) • 서천(소곡주) • 논산(장류, 딸기) • 아산(쌀)	• 천안(호두과자) • 금산(인삼, 깻잎, 흑삼, 약초) • 청양(구기자, 맥문동) • 부여(토마토)
전북	13	23	• 군산(흰찰쌀보리) • 완주(로컬푸드) • 김제(로컬푸드) • 순창(장류, 무·매실절임) • 고창(복분자)	• 익산(과채류, 고구마, 쌀, 보리) • 정읍(귀리, 구절초, 수박, 지황) • 장수(레드푸드) • 임실(치즈, 로컬푸드)	• 진안(로컬푸드, 김치) • 부안(양파, 오디) • 전주(미나리) • 무주(천마)
전남	15	22	• 여수(갯, 쑥) • 순천(야생차) • 나주(배) • 광양(매실) • 곡성(멜론, 매실)	• 고흥(유자) • 영광(쌀모시, 찰보리) • 보성(녹차) • 장흥(표고버섯) • 장성(컬러푸드, 편백, 사과)	• 해남(밤호박) • 영암(무화과) • 강진(맥주보리, 장류) • 진도(울금, 검정쌀) • 완도(흑염소)
경북	16	34	• 경북(사과) • 김천(포도, 자두) • 안동(사과, 마, 콩, 생강) • 영주(인삼, 사과) • 경산(대추, 복숭아) • 영천(포도, 복숭아, 마늘)	• 문경(사과, 오미자, 콩) • 의성(마늘, 한우, 자두) • 청송(사과) • 고령(딸기) • 청도(감(반시), 미나리) • 성주(참외)	• 예천(사과, 곤충, 참깨) • 상주(쌀, 오이, 꽃감, 포도) • 봉화(로컬푸드) • 영양(고추)
부산 · 경남	18	34	• 부산(대저토마토) • 진주(딸기) • 함안(연근, 참외) • 창녕(양파) • 통영(고구마, 유자) • 양산(딸기, 사과)	• 남해(시금치, 마늘) • 합천(양파) • 김해(단감, 산딸기) • 산청(쌀, 양잠, 딸기) • 밀양(사과, 깻잎) • 함양(산양삼, 여주, 오미자)	• 의령(망개떡) • 거창(사과, 산양삼) • 하동(매실, 녹차, 딸기, 배) • 창원(단감, 연근) • 거제(유자) • 고성(단감, 쌀보리)
세종	1	2	• 세종(복숭아, 로컬푸드)		
제주	2	4	• 서귀포(감귤)	• 제주(청귤, 블랙푸드, 당근)	

○ (시군별 보조사업자 선정 시) 융복합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(S/W, H/W 포괄지원)

-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
- 전통농업자원, 토종 동·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
-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

- 농·축·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
-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

○ 지원분야별 사용용도

- S/W 분야 : 홍보·마케팅, 디자인·브랜드 개발, 제품 및 기술 개발, 지적 재산권 등록,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,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, 고객관리 프로그램 도입, 온라인 거래 도입 및 운영 지원, 네트워크 구축 등
 - H/W 분야 : 제품 개발·생산시설, 판매시설, 체험시설 등
- * 차량(탑차 등),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하여 제한적 지원 허용(지원조건 : 국비 20%, 지방비 20, 자부담 60)

< 지원배제 사항 >

-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
-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(예 : 소 입식, 인삼, 녹차, 시설포도, 키위, 복숭아 등)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
-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
- 토지·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, 음식점·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
- *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·2·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,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·숙박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
-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
-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
- 비료·농약·사료·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
-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
-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
-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

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○ 재원 :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
○ 지원기준 : 국고 50%, 지방비·자부담 50%(자부담 20%이상)

- 지방비 부담의 경우,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(예시 : 국고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)

*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·형평성, 사업자의 책임확보,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

**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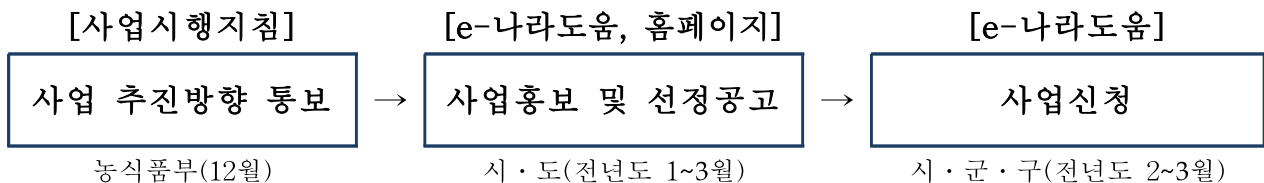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지구당 30억원(국고 50%, 지방비·자부담 50%), 4년간 지원

- 연차별 국고지원 : 3.5억원 → 5.5 → 4 → 2

☞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, 보조금 교부결정, 집행 관리,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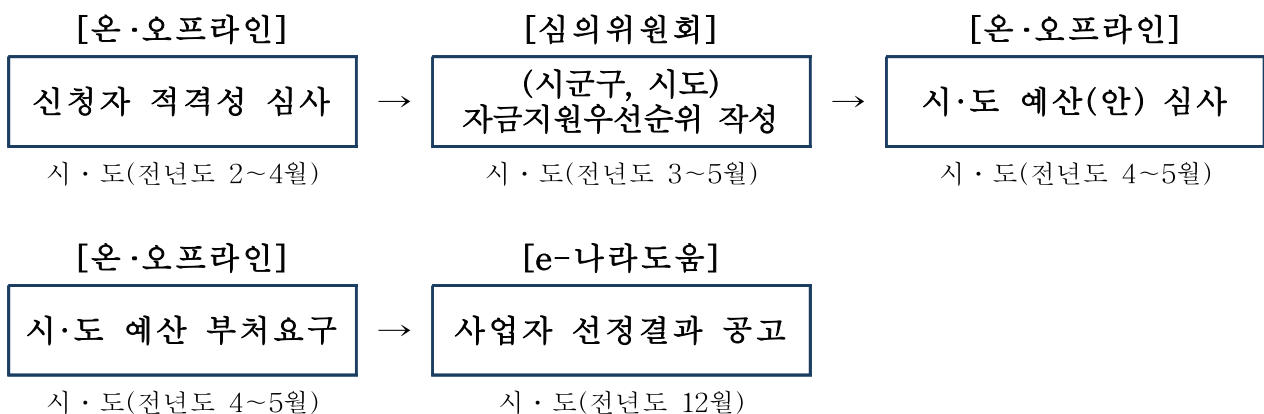
1. 사업신청단계



- 농식품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각 지자체(시·군·구 또는 시·도)는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
 -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
 -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
- 시·군·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(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체)
 - *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
- 시·군·구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,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·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
- 시·도는 시·군·구의 검토의견서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
- 시·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[별지 제1호 서식] 작성·제출 : 전년도 3월
 - 시·군 → 시·도
 - * 시·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,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·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
- 시·군·구에서 S/W 또는 H/W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도 상기 공모방식을 준용(입찰공고 원칙)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을 받음
 -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, 농식품사업의 교육·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

-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선정일정에 따라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함
 -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(사업계획서 등록)해야 함
 - *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(온라인 자격검증항목, 「기본규정」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,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)를 고지 후 검증항목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
 - *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(*.hwp, *.pdf, 스캔파일 등)
 - *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.
 -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(또는 Agrix)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음
 - 사업신청자가 농업인,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.
 - *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온라인 자격검증 통하여 미등록 경영체는 선정제외
- ※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‘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’을 참조

2. 사업자 선정단계



- 시·도는 시·군에서 제출된 “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”에 대해 사업타당성,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「전문평가단」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
 -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 - 지자체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필요할 경우 「농어업경영체육성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

- 신청자의 재무안정성,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, 중복편중지원여부,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

*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,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

○ 시·도는 「전문평가단」을 통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

- 전문평가단 구성은 공정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 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

* 전문가 :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, 경영·유통 분야 전문가 등

- 전문평가단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
- 사업계획 평가기준은 농식품부 표준기준(별도 통보)과 자율적 판단사항 포함하여 기준 마련
- 전문평가단을 통해 지원대상 예비선정 : (1차) 서면평가 → (2차) 현장평가 (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)
- 예비선정 이후, 시군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보완(전년도 4~5월)
- 전문평가단 심의·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·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않음

○ 시·군·구에서 S/W 또는 H/W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도 상기 선정방식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자 선정

○ 시·도는 사업대상 시·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을 최종 선정하고,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협의(전년도 4~5월)

* 심의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% 포함, 심사계획 보고

○ 시·도는 농식품부 협의결과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·도별 포괄보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(전년도 4~5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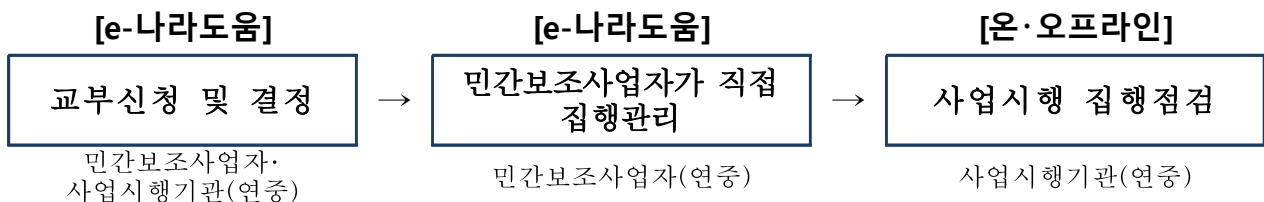
○ 사업확정 이후, 시·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(전년도 5월~11월)

○ 시·도는 시·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시·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 계획을 보완·수정하여 사업계획 최종 확정후 농식품부에 보고(전년도 12월)

* 컨설팅 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% 포함, 컨설팅 계획 보고

-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국회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, 사업별 자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
-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*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(「기본규정」 제51조제2항)
 - * 사업의 포기, 업종의 변경, 경영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%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

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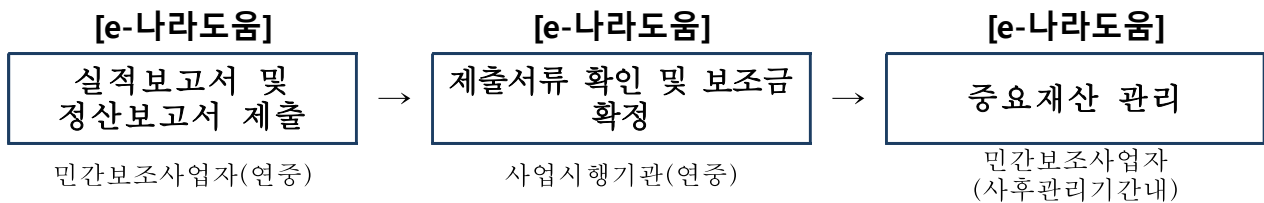
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·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
 - *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「기본규정」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
-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
 -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,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*은 반드시 명시
 - * (집행관리)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
 - * (계약) 1)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)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(위탁계약)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, 계약체결 등 수행
 - * (정산보고서 검증) 1)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)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
 - * (중요재산)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「보조금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

-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전표 등)를 등록 후 집행(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)
 -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*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
- * 사전교부형, 사후교부형, 「기본규정」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
-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‘부정집행 모니터링’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(10일 이내)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
 -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
- 시·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·도에 변경승인 신청
 - 시·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,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
 - 성과목표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함
- 시·군은 사업지구별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, 시·도에 제출(매년 1월)
 - * 세부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환류, 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.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
- 시·도는 매년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(매년 2월)
- R&D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전 타당성·효과성 평가실시후 추진
 - 사업시행자(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)는 R&D 추진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연구과제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신청(상시)하고, 통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R&D 추진여부 판단

- *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R&D 평가 안내 및 신청서 접수, R&D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, 결과통보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(익년 1월중)
-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사업단 요청 시 신규 사업단의 사업초기 R&D 종합계획에 대한 선행 유사기술 및 연구정보, 연구개발동향 등 조사·분석 서비스 제공
- 시·도 및 시·군은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R&D 추진상황 점검·관리
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(정산보고)를 등록
 -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
 - *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(계약, 조달지연 등)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
 -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
 -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,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
 - *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,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
 -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
-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
 - 중요재산의 현황은 「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」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
-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,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·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
 - *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,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,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*를 확인한 경우 「보조금법」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,
 - *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급)받은 경우,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와 사용,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
 - 아울러 「기본규정」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, 폐·휴업, 사업포기,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「기본규정」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
 -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
-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, 수행배제,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·관리
-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,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
-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·공급된 시설물, 기계·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2조(사업의 관리책임 등)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
-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(지역원물 확보 등)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
- 시·군·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
- 보조사업자(간접보조사업자 포함)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경영실적(등기부등본, 재무제표 등)을 시·군에 제출, 시·군은 이를 시·도에 보고하여야 함

* '13년 착수지구까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, '14년 착수지구부터는 4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

- 제조·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·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, 시·군·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

* 보조사업자 선정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

IV

평가 및 환류

1. 사업 성과측정

- 시·군은 반기별 「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」를 작성, 시·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: 8월말, 익년 2월말(서식 별도 통보)

- 시·도는 시·군의 자료를 확인·검토하고,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

- 시·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·평가 체계*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·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: 익년 1월말

*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·도 자체편성 의무화

-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,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시·도에 지시

-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

2. 평가 및 환류

- 시·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「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」를 작성(서식 별도 통보), 시·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: 익년도 1월까지

- 시·도는 시·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시·도에서 제출한 「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」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

- 평가방법 : 「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」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(서식 별도 통보)
-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·군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자 정부포상 추천, 사업단 생산 제품 판촉·홍보, 예산 추가(지자체 협조사항) 등 인센티브 지원
-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·보완, 예산 삭감 등 페널티 부여
 - 특히, 모니터링,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

[별지 제1호 서식]

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(안)

I. 사업개요

1. 추진배경
 - 지역여건, 현재까지 추진실적, 그간의 성과·문제점, 사업 필요성·목적 등
2. 향토자원 현황
 - 가. 향토자원의 성격
 - * 해당 자원의 생산량·면적(전국 내 지역 비중), 생산농가 수 등
 - 나. 산업화 가능성
 - *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
3. 사업목표(성과목표)
4. 성과지표
5. 추진전략
6. 중장기 투자계획

II. 사업추진 체계

- 사업추진단, 지원조직, 외부자문단 구성·운영 등

III. 세부실행계획

1. 사업내용
2. 사업기간
3. 단위사업별 추진계획
4. 기대효과
5. 연차별·보조사업별 투자계획
6. 단위사업별 설명자료

< 붙임 > : 연관사업 현황, 지방자치단체·사업단·참여기관 협약서, 각종 증빙자료 등